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TF 성패 ‘3대 쟁점’ 해결에 달렸다

TF 협상 테이블 이달 내 공식 출범...최대 관건은 ‘신뢰’ 회복
대통령실, 무안공항 인근에 RE100 산업단지 조성 제안한 듯

이달 공식 출범이 전망되는 광주군공항 이전 ‘6자 TF’의 협상 테이블에는 광주·전남의 미래가 걸린 3대 핵심 쟁점이 오르게 된다.

TF의 성공은 사실상 무안군이 제시한 ‘광주 민간공항 선(先)이전’, ‘광주시의 1조 원 지원 구체화’, ‘국가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시’ 등 3대 선결 조건을 어떻게 ‘패키지 달’로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실무회의에 이은 6자회담에서는 ‘무안 수용성’과 ‘정부 패키지의 설득력’이 담보되어야 합의로 이어 질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장 큰 난관은 ‘신뢰’의 문제다. 무안군이 첫 번째 조건으로 ‘민간공항 선이전’을 내건 것은 과거 협약 파기에 따른 불신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2018년 광주·전남·무안은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나,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과 연계를 추진해 사실상 합의를 파기한

바 있다.

광주시가 “민항은 군공항과 무안으로 함께 간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민항만 무안으로 이전할 경우 군공항만 광주에 남게돼 사실상 군공항 문제가 원점이 된다는 논리다.

여기에 민항 문제는 무안 정상화가 전제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무안공항 정상화 일정과 수요·노선 구조가 현실적인 타임라인을 가르는 바로미터가 될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광주시는 ‘더 앞당겨 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무협에서 무안과 정부의 계획표를 맞춰야 6자로 진행할 수 있다

무안군으로서는 군공항을 받기도 전에 민간공항 이전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무안군 제시 3대 선결 조건

- ① 광주 민간공항 선(先)이전
- ② 광주시 1조원 지원 구체화
- ③ 국가차원 획기적 인센티브

만큼, 이번 TF에서 광주시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 쟁점인 ‘광주시의 1조 원 지원’은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무안군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약속한 1조원 지원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행 방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방부의 사업성 산출 결과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초 광주 군공항 이전 총사업

비 재산출에 착수했다. 군 공항 이전·지원 시설·접근 교통·환경·보상까지 포괄하는 총액 구조가 다시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 추계는 5조748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공항 건설비 4조791억원, 종전부지 개발비 8356억원, 금융비용 3825억원 등을 포함한 규모다.

여기에 광주시는 시 재정을 추가 해 1조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않는 다는 입장이다.

TF의 성패는 세 번째 쟁점인 ‘국가 인센티브’에 달려 있다.

무안군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점에서도.

배후 교통과 생활 SOC, 산업·관광 연계, 소음·환경 대책 같은 가시적 보상과 지역 미래 비전이 포함돼야 무안군이 주민들을 설득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이미 국토연구원 등에 의뢰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최근 무안군에 광주 군공항 이전 인센티브로 무안공항 인근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949년에 민간공항으로 개항한 광주공항은 1964년 현재 광산구 신촌동으로 이전해 군공항과 통합해 운영되고 있다. 광주공항은 1995년 국제공항으로 승격했지만, 지난 2008년 국제선 기능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됐다. 광주공항은 서구와 광산구 개발에 따른 도시화로 주민들의 소음·재산권 침해 피해로 군공항 이전 요구가 지속돼 왔다.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이전 논의 시작됐다.

애초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무안지역 15.3㎢(463만 평) 부지에 군공항 시설을 옮겨 짓는 사업으로 11.7㎢(353만 평) 규모로 군공항 시설을 먼저 짓고 종전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개발 이익으로 이전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 거론된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총리, 국회 예결위 참석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첫 회의에서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 개시 ‘대통령의 비상 권한’ 법적 공방 치열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가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지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으로, 대법원 결정은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다. 오전에 시작된 구두 변론 절차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정부 측 대리인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州)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차례로 나와 법적 공방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직접 구두변론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 심리를 사흘 앞두고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날 심리의 주요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데 그중 하나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100개 이상 나라에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후 한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

으로 이 관세를 15%로 낮췄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이날 대법관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국가 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이에 맞서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헌법을 만든)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말했다.

카티알 변호사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언제든, 어느 나라든, 어떤 제품이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 사건에서 정부가 승리하면 우리는 그 (빼앗긴 의회의) 권한을 다시 되찾아 올 수 없다”고 호소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상당수 대법관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다고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보도했다.

특히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세금 부과 권한에 대해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언급했다. 로버츠 대법원장 역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반면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대통령 권한 범위와 관련, 과거 하급심 법원이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을 허용한 선례가 있다면서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연합뉴스

멕시코, 최대 50% 관세 2027년까지 연장...한국도 영향

멕시코 의회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상대로 한 행정부의 최대 50% 관세 부과안 승인 기한을 2027년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멕시코 전자 관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회 결정문을 보면 멕시코 하원 경제통상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연 9차 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에 대한 심

의·승인 기한을 66대 하원 활동 종료 시점인 2027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관련 회의록을 보면 하원 소위 위원들은 앞서 지난달 초 루이스 로센도 구티에레스 로마노 멕시코 경제부 대외무역 담당 차관으로부터 해당 법안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현재 0~35%대 품목별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상향된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중국을 비롯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멕시코를 대(對)중남미 최대 교역국(2023년 기준 76조원 상당)으로 둔 한국도 해당한다.

세인바움 대통령은 이와 관련, 몇 차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국 및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면서, 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국가들과 협의할 수 있음을 피력한 바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40

1985 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